

외부 자문가의 직업 윤리와 법적 책임은?

전문가의 자율감시를 강화하고, 적절한 법적 책임 부과할 때 자본시장 효율성 보장돼

최근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주주들이 상장에 관여한 상장주간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또한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회계사가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부실공시, 분식회계 등의 직접적인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외부감사인, 변호사, 신용평가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외부 자문가들이 위법행위자의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불법을 억제하고 기업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책 목표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는 현실적 요청이 결합된 것이다. 정부기관이 기업 활동을 사전에 감시하고 제재하려면 인적·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는 데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반면 자문가들은 전문가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불법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엔론, 월드컴의 부정회계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외부 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당시 엔론의 회계부정에 관한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소송에 따른 책임과 평판 훼손으로 결국 해체의 길을 걸었다. 한국에서도 과거 대우그룹의 회계를 담당한 청운회계법인이 문을 닫은 사례가 있다. 회계사, 신용평가사, 변호사 등의 자문가는 자신들의 명성과 평판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고객에게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고객을 위해 위법행위를 감수할 유인이 제한되게 마련이다. 자문가들이 자신의 직업윤리와 법적 책임에 근거해 기업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반면, 자문가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자문가들이 위험성이 높은 기업의 자문을 회피함으로써



회계 부정으로 해체된 아서앤더슨 직원들.

시장의 정보 불균형 현상이 더 왜곡될 수도 있다. 또한, 소송과 법적 책임 등의 위협으로 인해 소수의 대형 자문회사만이 시장에 존속하게 되는 과점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자문가들이 위협도를 반영하여 보수를 인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됨으로써 거래비용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자문가들의 법적 책임 가중만으로는 위법행위의 억제를 최적화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전문가 집단의 자율감시 강화와 더불어 전문가 윤리와 법적 책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의뢰인의 열성적 옹호자로서 충실 의무와 비밀유지를 부담하므로, 의뢰인의 위법에 대해 어느 정도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나 공익을 고려하게 되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원활한 정보 소통이 제한되어 변호사 제도 자체가 무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업자문 변호사의 진정한 의뢰인은 '기업' 자체이지 업무 연락을 취하는 '임직원'이 아니다. 변호사는 자문 과정에서 불법이나 규정위반을 발견할 경우 그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경고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조력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감독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지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과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의 발생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회사의 최고 법무책임자나 상급 집행임원에게 위법행위를 보고해 회사에서 내부적인 통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는 사회에 대한 공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고도의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기업 감시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기업도 위법행위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가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